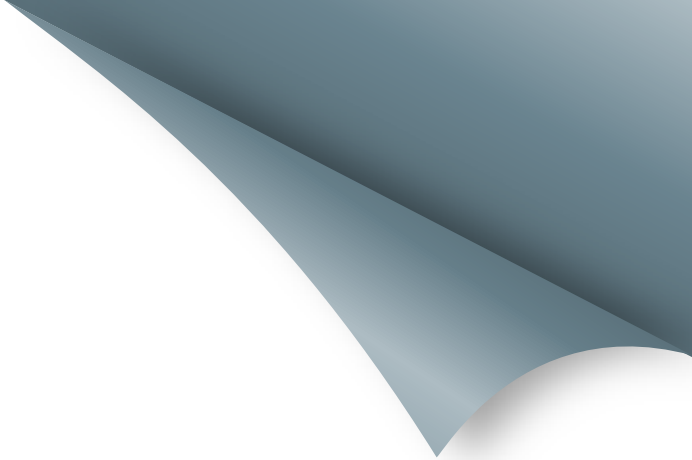




시장경제의 이해

건국대학교 경제학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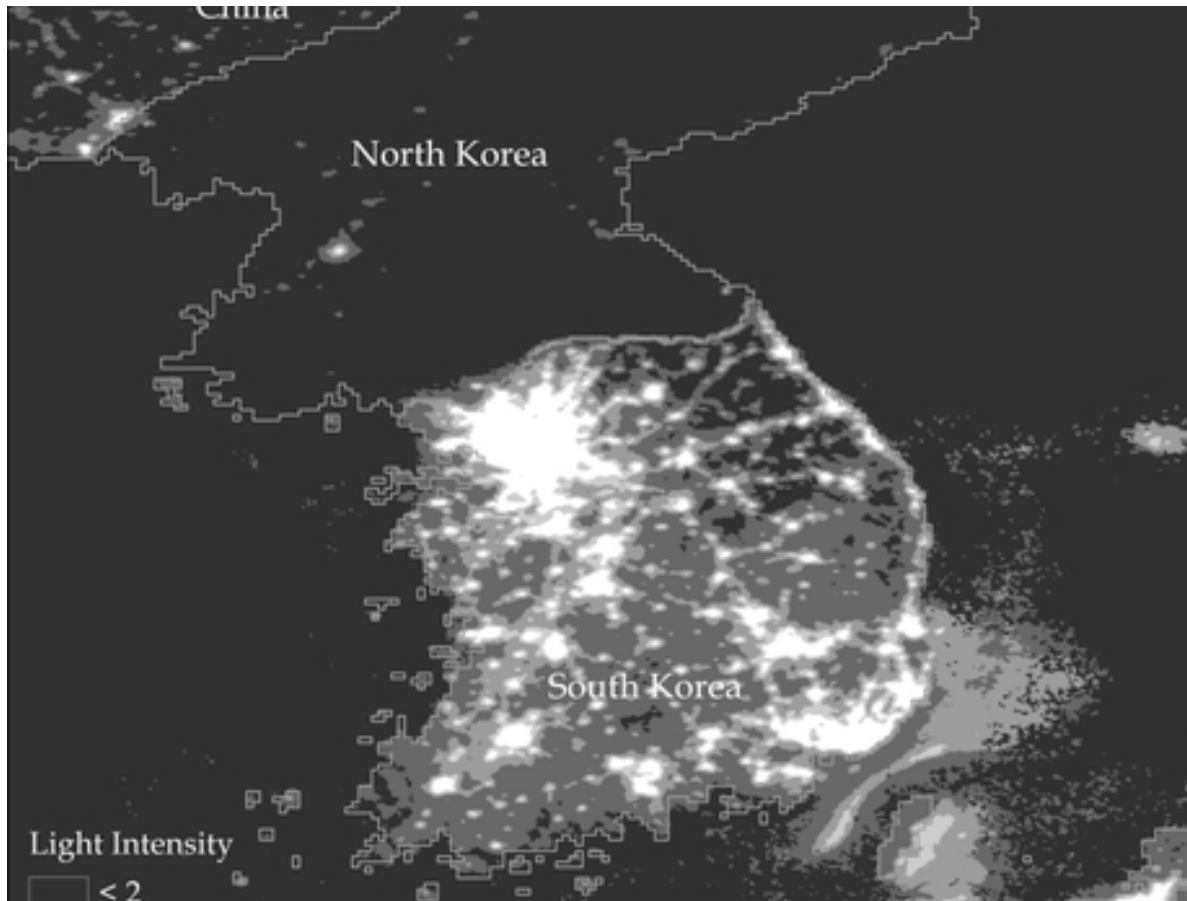
권 남 훈

I. 들어가며

- “자본주의 시장경제”라는 말에서 연상되는 느낌?
 - 탐욕에 물든 자본가들의 착취?
 - 오로지 자신의 이익만을 추구하는 비인간적인 경쟁?
 - 유사 관용구: “신자유주의의 폐해”
- 그렇게 나쁜 것이라면 우리는 왜 그 속에서 살고 있을까?
 - 뭐가 좋고, 뭐가 나쁜 지 알고 비판하고 있는가?
 - 자유시장경제 때문인 것은 맞는가?
 - 어떤 방향을 추구해 나가야 하는가?

I. 들어가며

- 대한민국과 북한은 자본주의 시장경제의 체제적 우월성을 보여주는 극명한 사례로 활용됨



I. 들어가며

- 하지만, 자본주의 국가라고 해서 모두 성공하는 것은 아님 ⇒ 그렇다면 왜? 그리고, 어떻게?



Nogales, Mexico/United States(Arizona)

이후 내용의 순서

II. 시장경제의 기본: 시장이란 무엇인가?

III. 시장은 어떻게 성과를 내는가?

IV. 시장 vs. 정부

V. 시장 만으로 모두 해결되는가?

VI. 시장경제의 미래 (뉴 노멀 시대의 시장경제)

VII. 결론

II. 시장경제의 기본

- 경제체제
 - 무엇을 생산, 소비하고 어떻게 나누어 가질 지를 결정하는 방식
- (자유)시장경제(free market economy)
 - 자발적인 선택과 교환을 통해 생산과 소비가 이루어지는 경제
 - ‘가격’을 신호로 활용함
- 자본주의(capitalism)
 - 생산수단을 사적으로 소유하고 이윤을 추구
 - Q: 자본주의 없는 시장경제가 가능할까?

II. 시장경제의 기본

- 시장경제의 대안?
 - 명령경제(command economy)
 - Q: 누가 명령을 내리는가?
- 개인 vs. 기업 vs. 정부
 - 시장경제는 개인과 기업들 간의 자발적 수요/공급에 의해 운영되고, 정부는 강제성을 띠고 부분적으로 개입
 - 오늘날 모든 시장경제국가에서는 3대 주체의 역할이 있으며, 단지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임
 - Q: 기업은 개인과 어떻게 다른가?

응용사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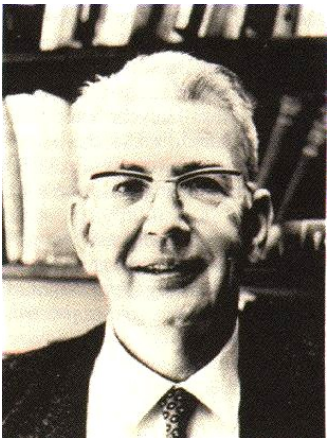
- 얼마나 많은 커피를 생산할 것인가?
- 누가 이 커피를 마실 것인가?
- 잘한 이들에게 어떻게 보상을 줄 것인가?

II. 시장경제의 기본



- “The whole of society will have become a **single office and a single factory**, with equality of labor and pay.”

Vladimir Lenin, *The State and Revolution*.



- “The main reason why it is profitable to establish a firm would seem to be that there is **a cost of using the price mechanis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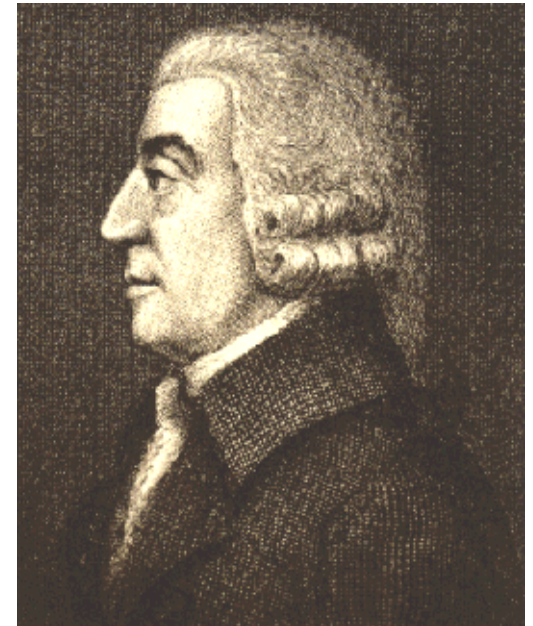
Ronald Coase, *The Nature of the Firm*

III. 시장은 어떻게 성과를 내는가?

동인: 이기심에 기초한 자발적 협력

“푸줏간 주인, 양조장 주인, 빵 굽는 사람들의 호의 때문에 우리가 오늘 저녁을 먹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스스로의 이익을 위해 일하기 때문이다. ... 각 개인은 ... 공공의 이익을 증진시킬 의도도 없고 그가 얼마나 공익을 증진시키고 있는지도 모른다. ... 각 개인은 그들의 사적 이익만을 추구하고 있고 이 과정에서 ...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 인도되고 있다.”

Adam Smith, 국부론



시장에서 선택 받기 위한 개인의 노력과
경쟁이 성과의 원천

III. 시장은 어떻게 성과를 내는가?

- 수단1: 분업의 이익과 규모의 경제

- 아담 스미스의 ‘핀’공장 사례

- 핀을 만들기 위한 공정은 8~10개로 분리 가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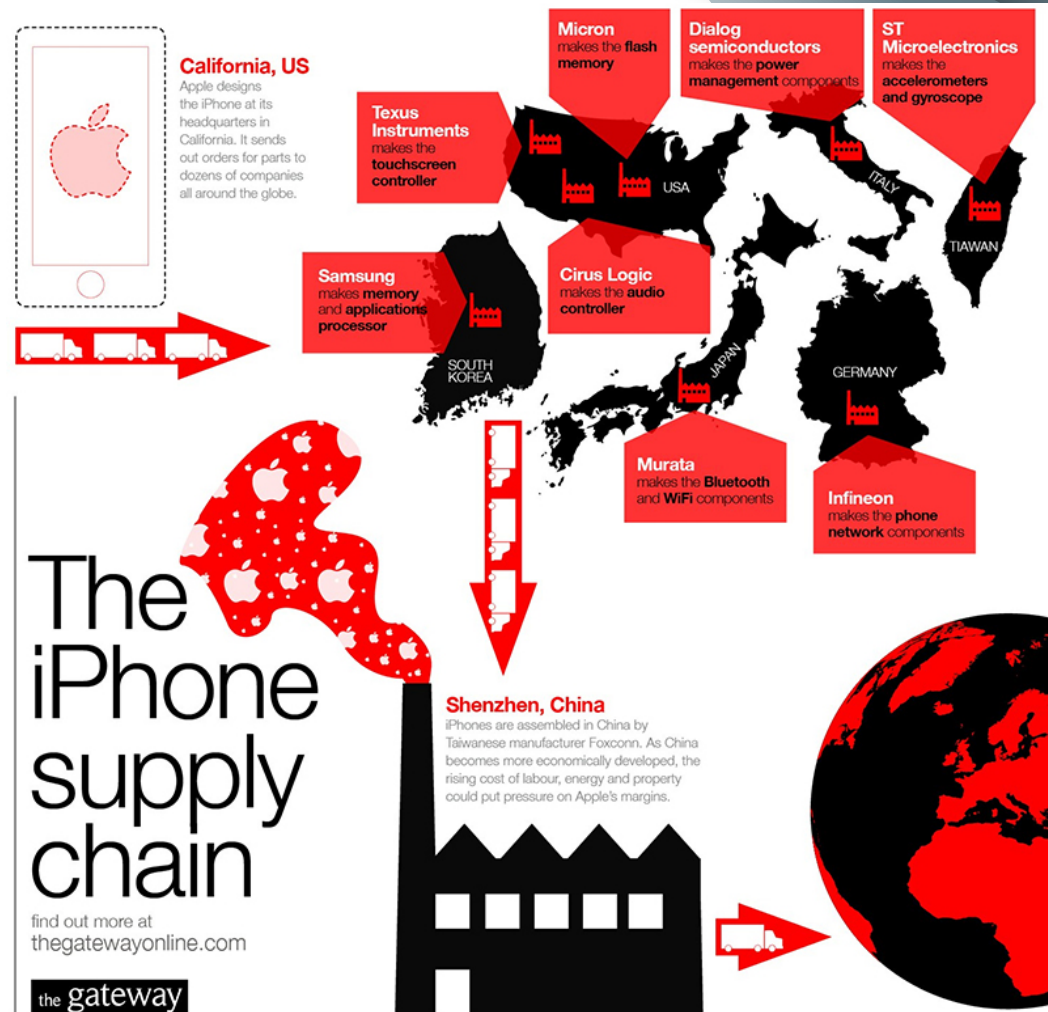
“10명이 하나의 공장에서 분업을 통해 핀을 만들면 하루에 48,000개, 또는 1인당 4,800개를 제조 가능하다.

하지만, 10명이 각각 핀을 만들 경우 하루에 1개씩, 많아야 20개 정도를 만드는 게 고작이다”

III. 시장은 어떻게 성과를 내는가?

• 수단2: 절대우위와 비교우위

- 가장 뛰어난 이들이 생산을 담당하도록 함
- But 아무리 뛰어나도 혼자서 모든 걸 할 순 없음
- '비교우위'에 따라 생산과 협력을 할 것



III. 시장은 어떻게 성과를 내는가?

• 수단 3: 기업가 정신(Entrepreneurship)

- 새로운 방식으로 새로운 상품을 생산하는 기술 혁신을 통해 '창조적 파괴'(creative destruction)에 앞장서는 기업가의 노력이나 의욕이 '기업가 정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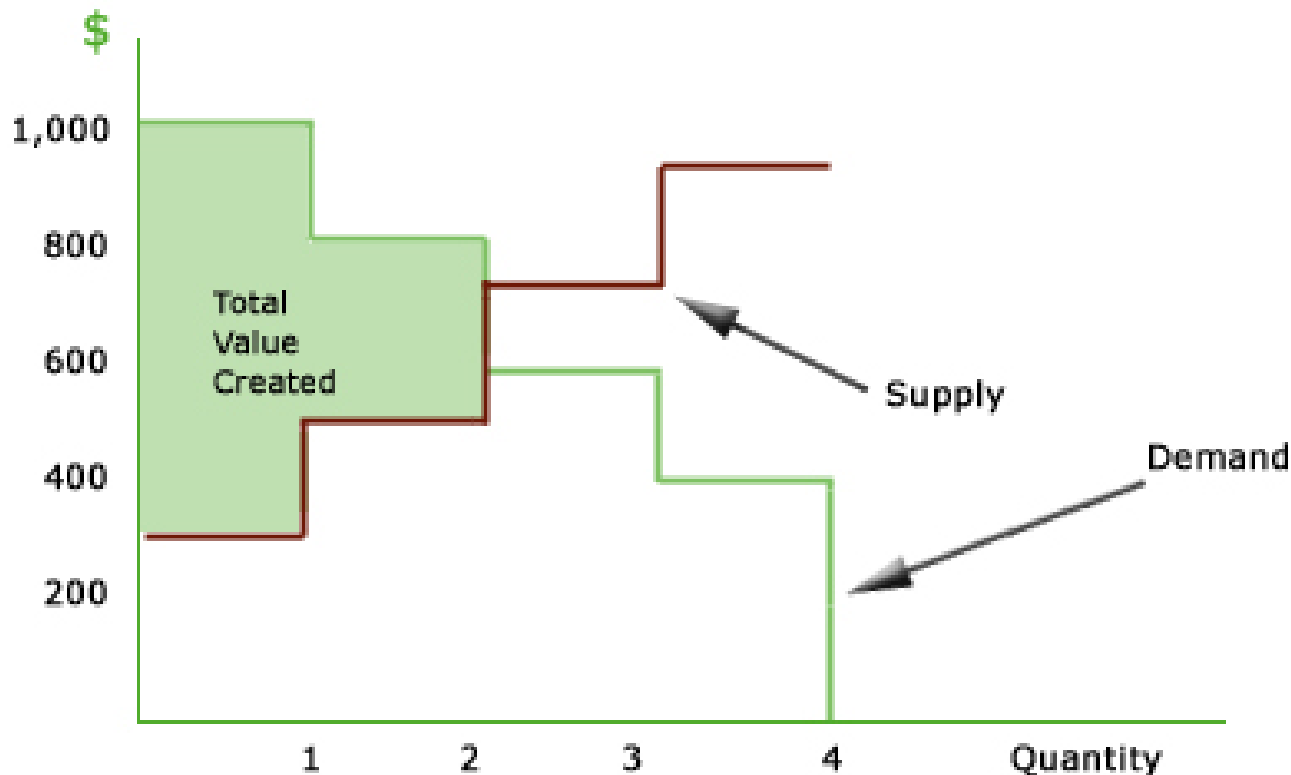
J. Schumpeter

- “Entrepreneurs, by definition, shift resources from areas of low productivity and yield to areas of higher productivity and yield. Of course, there is a risk they may not succeed. But if they are even moderately successful, the returns should be more than adequate to offset whatever risk there might be.”

P. Drucke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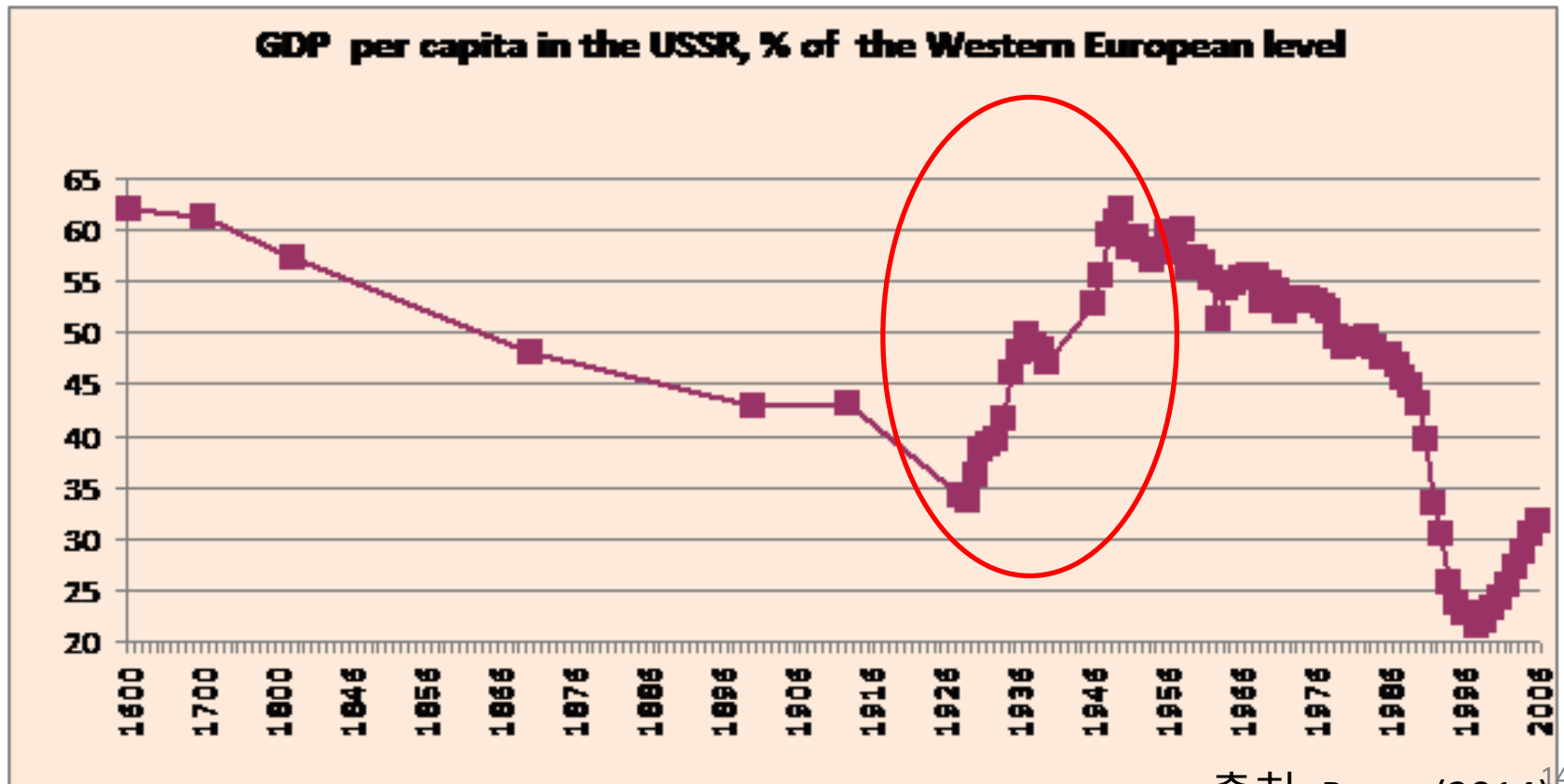
III. 시장은 어떻게 성과를 내는가?

- 시장은 앞서 3가지의 수단을 가장 효과적으로 적용
 - 가장 효율적인(싸게 생산가능) 이들이 생산
 - 가장 원하는(비싸게 구매가능) 이들에게 배분
 - 더 잘 해낼 수 있는 이들이 더 많은 보상을 받음



IV. 시장 vs. 정부

- 사례1: 소련의 경제성장과 몰락
 - 명령/동원경제는 후진사회에서 '잠시 동안' 효과적일 수 있지만, 일정 단계 이상의 발전에는 성공하기 어려움



IV. 시장 vs. 정부

- 사례2: 중국의 대약진운동과 대기근(1958~1961)
 - 정책판단의 실수는 재앙적인 결과로 이어지기도 함
 - 농업의 집단화
 - 가내 철강생산(토법고로)
 - 참새잡기/벼심기 방식의 변경
 - 대기근으로 약 4,000만 명 사망 추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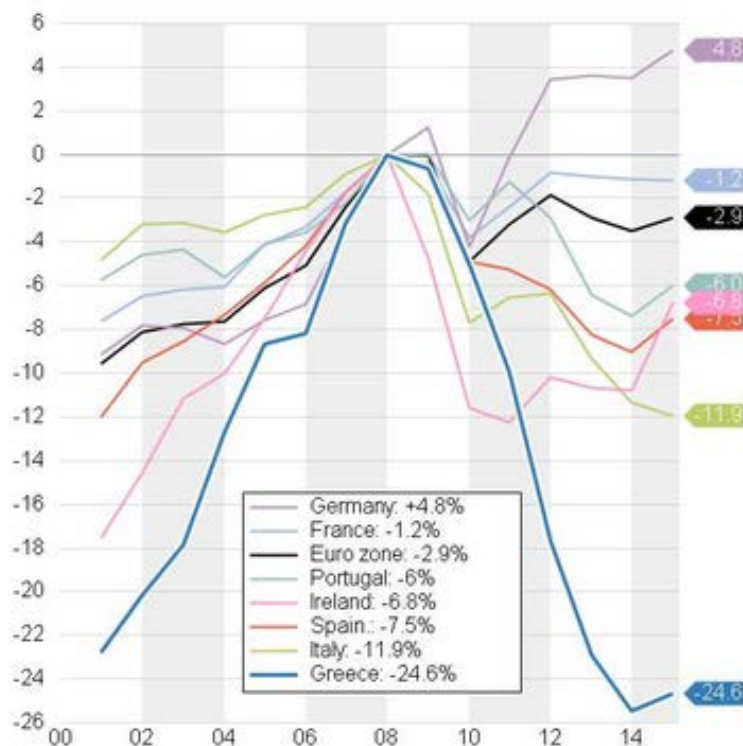


IV. 시장 vs. 정부

- 사례 3: 그리스 재정위기
 - OECD 회원국이 맞은 경제위기
 - 그리스는 2008년 세계 금융위기 이후 지속적 파산위기에 몰렸으며, GDP가 6년 동안 25%나 감소
 - 2차례의 구제금융과 채무탕감에도 불구하고 유로 존과 EU탈퇴 위기에까지 몰림
 - 그리스 위기의 원인은 구조적인 것이며 정부의 포퓰리즘 추구정책에서 비롯
 - 탈세와 부패: 지하경제의 규모는 GDP의 40%
 - 전체 고용인원의 25%가 공무원 (누구도 정확히 모름)
 - 높은 연금혜택과 다양한 특혜
 - 분식회계를 통해 재정상황을 속이고 유로존 가입
 - 허약한 경제구조가 가려진 채 빚을 이용한 잔치 지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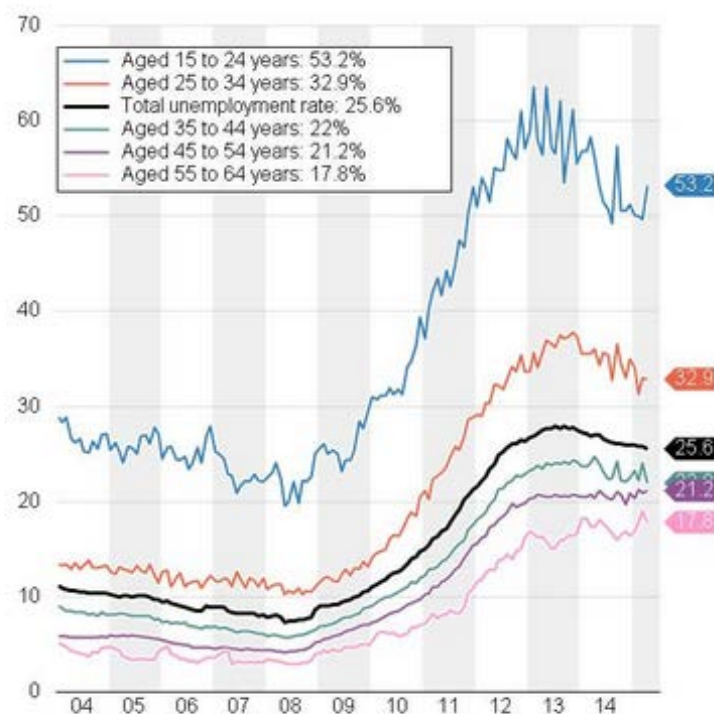
GREEK GDP PER CAPITA

GDP at market prices per capita rebased to zero at end-200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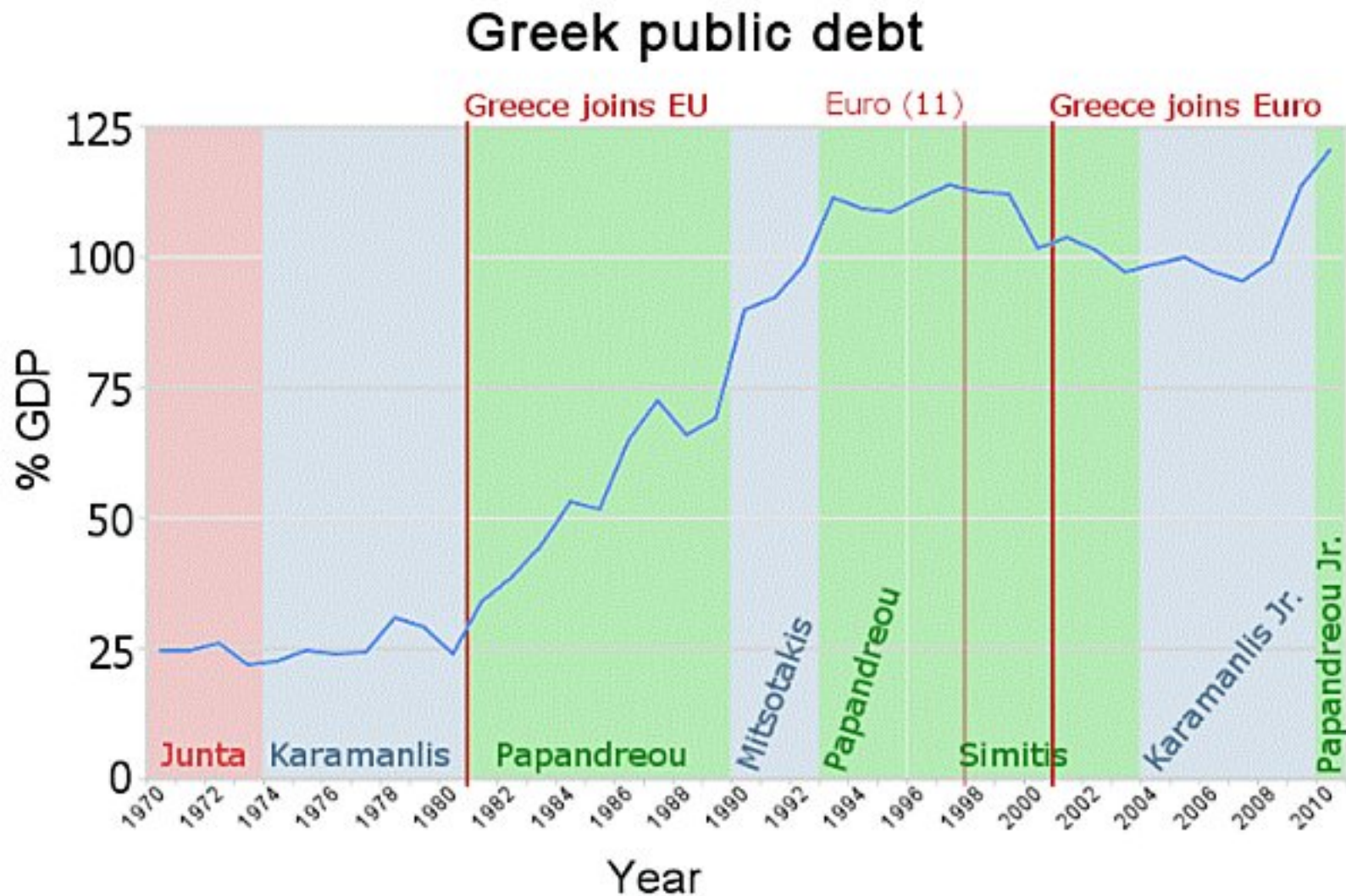


GREEK UNEMPLOYMENT RATE BY AGE

Unemployment rate - percent



IV. 시장 vs. 정부



IV. 시장 vs. 정부

- 왜 이런 실패가 일어나는가?
 - 정부도 사람으로 이루어진 조직임
 - 공무원들도 자신들의 이익을 추구
 - 정부가 가지는 정보와 의사결정능력의 한계
 - 정부는 정치적 구조에 의해 영향을 받음
 - 기업이 주주의 의사에 영향을 받는 것과 마찬가지로
 - 독재/이해관계자/ 대중영합주의(포퓰리즘)

IV. 시장 vs. 정부

- 정부정책과 규제, 제도는 이익집단 간 이해조정 of 산물
 - 포획이론(Capture Theory): 규제권자가 피규제자의 이익을 적극적으로 보호하고 증진
- 공익 추구의 방향성이 언제나 분명한 것은 아니며, 그 과정에서 (소수의) 이해관계자의 입김이 강하게 작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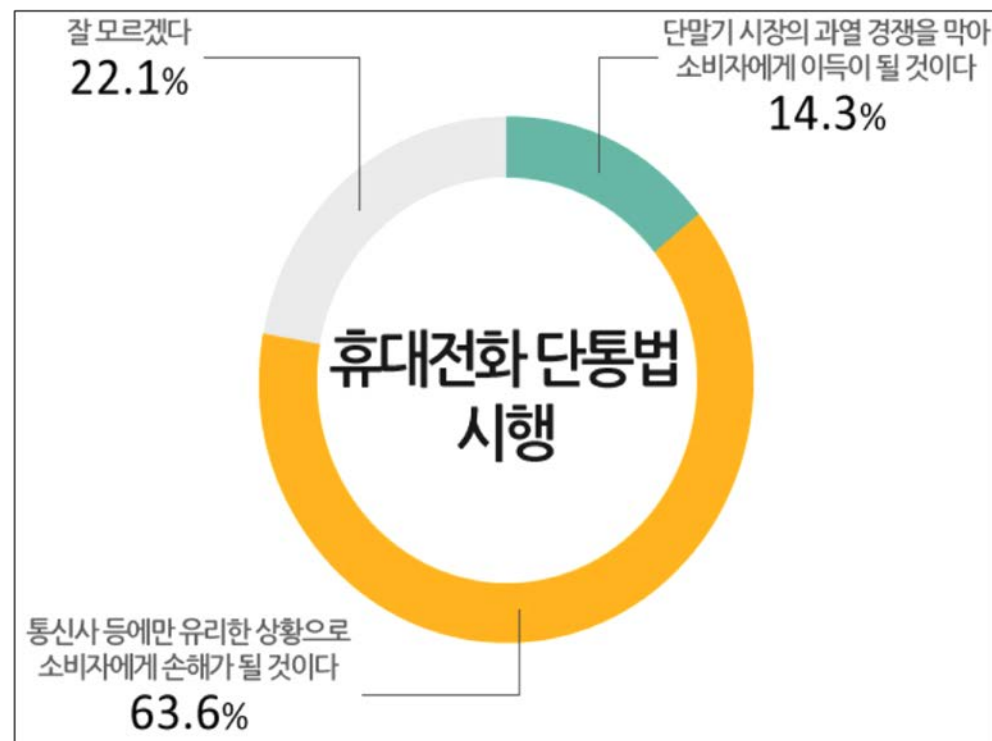
Example

- 단말기 유통법
- 대형마트 의무휴업제
- 기타 각종 이해관계자간 충돌사례

단말기 유통법



(2014년 5월 28일 공포)



(모노리서치 설문조사. 10/14~15일 전국 성인남녀 1,086명 대상)

“대형마트 영업규제로 일자리 감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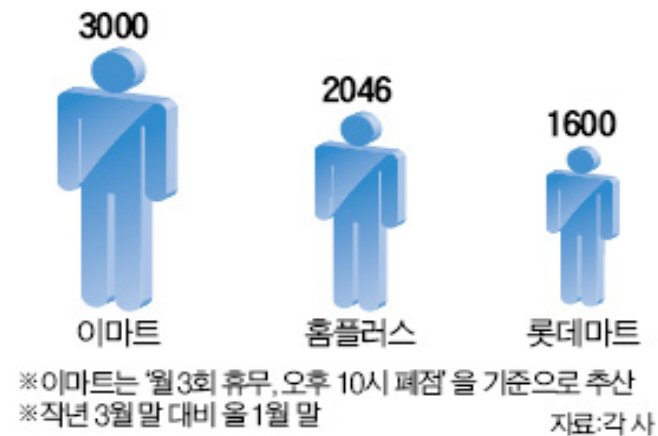
(한국경제신문, 2013.02-15)

보안·주차·청소 '주말 아르바이트' 실종
롯데마트, 정규직 2%·파견직 20% 줄여
정규직보다 시간제 근로자 피해
재래시장 고용효과 적어... "차라리 부담금 걷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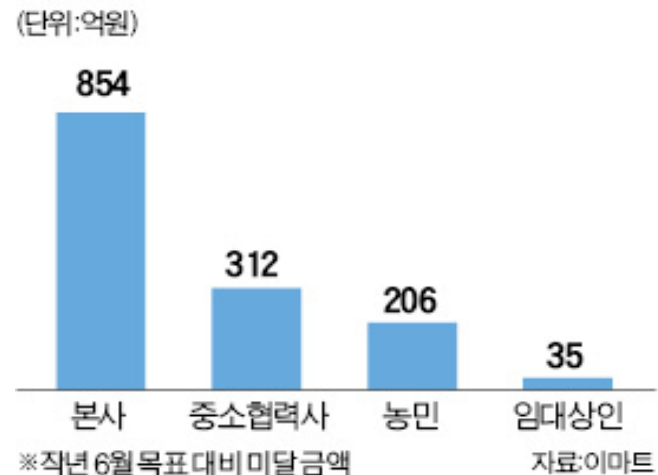
한국경제신문이 2월 14일 이마트 홈플러스 롯데마트 등 대형마트 3사의 점포 근무 인원을 집계한 결과 강제 휴무와 심야 영업 제한이 처음 시행된 지난해 3월 이후 10개월여 만에 약 6600개의 일자리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영업규제로 감소한 대형마트 근무 인원
(단위:명)



이마트 의무휴업에 따른 매출 타격



“대형마트 의무휴업 때문에 시금치 2만 단 갈아엎었다”

전국 지방자치단체에서 4월부터 시작된 대형마트와 기업형수퍼마켓(SSM)의 영업규제로 엉뚱한 중소기업이나 농·수·축산 농가의 피해가 커지고 있다. 지자체는 전통시장과 골목상권 보호를 명분으로 내세우고 있지만 대형마트나 SSM에 납품하던 중소기업체나 농어민들이 덩터기를 쓰고 있는 것이다. 특히 최근 정치권이 대형마트의 영업시간과 의무휴무를 더욱 강화하는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안을 처리할 움직임을 보이면서 피해 우려가 더욱 커지고 있다. 부산의 어묵공장인 늘푸른바다는 예년보다 올 매출이 20% 정도 줄었다. 이 회사 윤훈 영업팀장은 “대형마트가 매출이 주니 주문량을 자꾸 줄이는 판에 휴무일을 더 늘리면 우리 같은 작은 업체만 죽는다”고 하소연했다. 경기도 남양주에서 시금치 농사를 짓는 이이봉씨는 “내년 대형마트 휴무일이 늘면 납품 물량이 더 줄어 하루아침에 실업자가 되는 거 아닌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중앙일보, 2012.11.20)



이마트 휴무 따른 농가·중소기업 피해

	당초 예상 매출	실제 매출	감소 규모
이마트	1조2450억	1조1596억	854억
농산물	2933억	2727억	206억
중소기업 제품	4435억	4123억	312억
입점업체	499억	464억	35억

※올 6월 기준, 6월은 전국 이마트 147개 점포 중 103곳이 월 2회 휴무.

자료:이마트

반대에 부딪친 영등포 역 앞 횡단보도 신설, 영등포역전 지하상가 상인회 반대운동 나서



지난 17일 월요일부터 영등포역 건너 영등포우체국 앞에선 '영등포역 횡단보도 신설반대' 문구의 현수막이 내걸린 채 시위가 벌어지고 있다. (2012.9.1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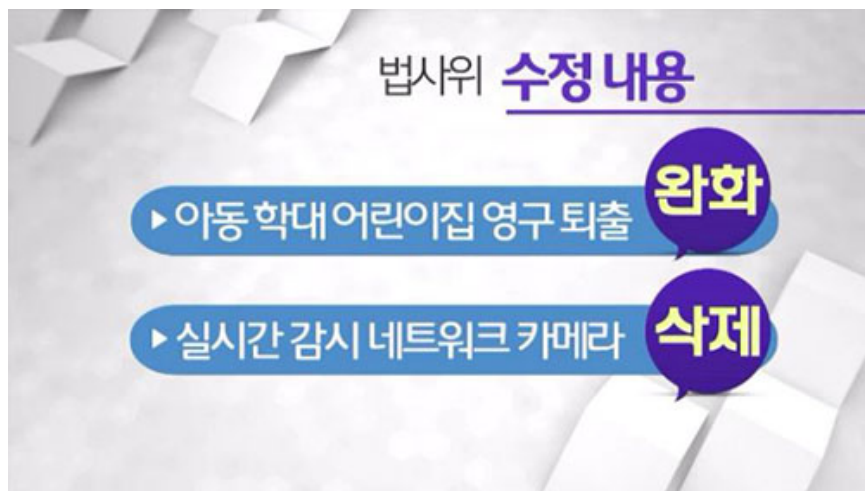
“장애인 보행권 확보”
박수친 시민단체
vs.
“지하상가 죽이는일”
화난 상인들

사진사들 "여권사진 무료촬영 철회하라"



한국프로사진협회 회원 1,500여명이 27일 [서울](#) 종로구 보신각 앞에서 집회를 열고 정부의 여권사진 [무료](#) 촬영 방침에 반발하며 가지고 온 [카메라](#)를 부수고 있다. 이들은 "전국 8,000여개 사진관 중 80%가 여권사진 등 [증명사진](#)을 주로 촬영하는데 무료 촬영이 실시되면 사진종사자 2만여명이 일자리를 잃을 것"이라며 [서비스](#) 도입 철회를 촉구했다. 외교통상부와 행정[안전](#)부는 지난 3일 여권신청을 받는 시·군·구청에서 여권사진을 찍어 주는 '[전자여권](#) [얼굴](#) 영상 [실시간](#) 취득 시스템'을 올해 말부터 도입하겠다고 발표했다. (한국일보, 2012.01.28)

‘어린이집 CCTV법’ 부결, 드러난 로비정황



민간어린이집 연합회라는 곳이 있다...우선 1단계로, 단체 이사회에서 관련 사항을 결정한 다. 그리고 이를 전국 지회에 전파한다. 그럼 행동에 나서는 것은 지역에 근거를 둔 어린이 집들이다. 목표는 지역구 의원 사무실. 찾아가서 이야기하고, 전화하고, 지역구 의원과 약속을 잡고, 또 설득작업을 했다고 했다...지역구 의원들로서는 무시할 수 없는 것들이었을 것이다...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달 복지위에서 강력한 영유아 보육법 개정안이 통과되자, 이번에는 로비 혹은 설득의 대상을 법사위로 옮겼다...이렇게 누더기(?)가 돼 법사위를 통과 한 어린이집 CCTV 의무화 법안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회의에서 부결되고 말았다. 그런데 법사위원회 소속 의원들의 투표 결과를 보면 고개가 갸우뚱 해지는 면이 있다. 본인들이 주장해 상당히 완화된 안이 본회의에 올라갔음에도 15명 가운데, 찬성은 4명 뿐이다. 기권 4명, 반대 1명에, 6명은 아예 투표에 참여하지 않았다. 사실상 11명이 법안이 통과되기를 바라지 않는 마음을 드러낸 것이다 (KBS 취재후기, 2015.3.6).

<http://news.kbs.co.kr/news/view.do?ncd=3031236>

V. 시장만으로 모두 해결되는가?

- 정부의 실패와 한계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해야만 하는 중요한 역할들이 있음
- 시장경제의 기능을 해치지 않으면서 정부가 해야 할 역할의 범위와 한계를 규정하는 것은 어렵지만 꼭 필요한 일임
 - 하지만, 정부의 실패를 시장의 실패로 호도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는 점을 유의해야 할 것임

V. 시장만으로 모두 해결되는가?

- 시장이 작동하기 위한 frame의 확립
 - 법치주의
 - 재산권의 확립과 계약자유 보장
 - 공정경쟁의 보장
- 시장 실패(market failure)의 교정
 - 외부성과 공공재
 - 정보의 비대칭성
- 사회통합의 유지
 - 성장유지와 경기변동 최소화
 - 빈곤해소와 불평등 완화

V. 시장만으로 모두 해결되는가?

- 시장이 작동하기 위한 frame의 확립
 - Acemoglu and Robinson (2012) “Why Nations Fail”
 - 착취적(extractive) 정치시스템과 포용적(inclusive) 시스템
 - 소수 집단의 이익을 위해 착취가 이루어지는 체제는 결국 실패할 수밖에 없음 (자본주의 시장경제라 하더라도 허울에 불과)
 - 법치주의, 재산권 확립, 계약의 자유 보장
 - 시장이 굴러가기 위한 최소한의 틀
 - Q: 조선은 왜 내리막길을 걸었나?
소말리아에는 왜 해적이 들끓나?

V. 시장만으로 모두 해결되는가?

- 시장 실패(market failure)의 교정

- 음의 외부성/공유자원
 - 교통법규 위반, 음주운전
 - 공해, 환경파괴
 - 무허가 건물증축, 난립한 간판
 - 천연자원의 남획

⇒ 이런 것들은 시장에서는 (사회적 최적에 비해) 너무 많이 발생

- 양의 외부성/공공재
 - 예방주사, 마스크, 자가격리 (e.g. 메르스 사태)
 - 등대, 도로, 다리
 - 치안, 국방
 - 연구개발

⇒ 이런 것들은 시장에서는 (사회적 최적에 비해) 너무 적게 발생

V. 시장만으로 모두 해결되는가?

- 시장 실패(market failure)의 교정
 - 정보의 비대칭성
 - 금융, 의료보험 등 소비자와 판매자의 정보의 차이가 큰 경우
 - 규제를 통해 보호수단을 마련
 - 유의사항
 - 시장실패를 교정한다는 명분 하에 지나친 개입을 함으로써 시장기능을 왜곡하는 경우도 적지 않음

“새롭다 싶으면 법 때문에...” 사업자는 벤처들 아니다



지난해 말 서비스를 처음 시작한 '콜버스'는 현재 정부 부처의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 콜버스는 전세버스와 버스 승객을 애플리케이션(앱)으로 연결해주는 새로운 개념의 서비스다. ...그러나 이 서비스는 최근 서울시가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에 콜버스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을 위반했는지 여부를 판단해달라고 의뢰하면서 '올스톱' 위기에 직면했다. ...택시조합 측은 "콜버스가 노선을 마음대로 변경하고, 학교·단체 등과 일대일 계약을 하지 않는 등 법을 어겼다"고 주장하고 있다. 여기에 지난해 말 국회를 통과한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으로 중고차 거래 벤처 업계 역시 서비스 운영에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이 법안은 온라인 자동차 경매업체도 오프라인에서 사무실 등 각종 공간을 확보하지 않으면 불법 업체로 규정하기로 했다(디지털 타임스, 2015. 1. 5)

V. 시장만으로 모두 해결되는가?

- 사회통합의 유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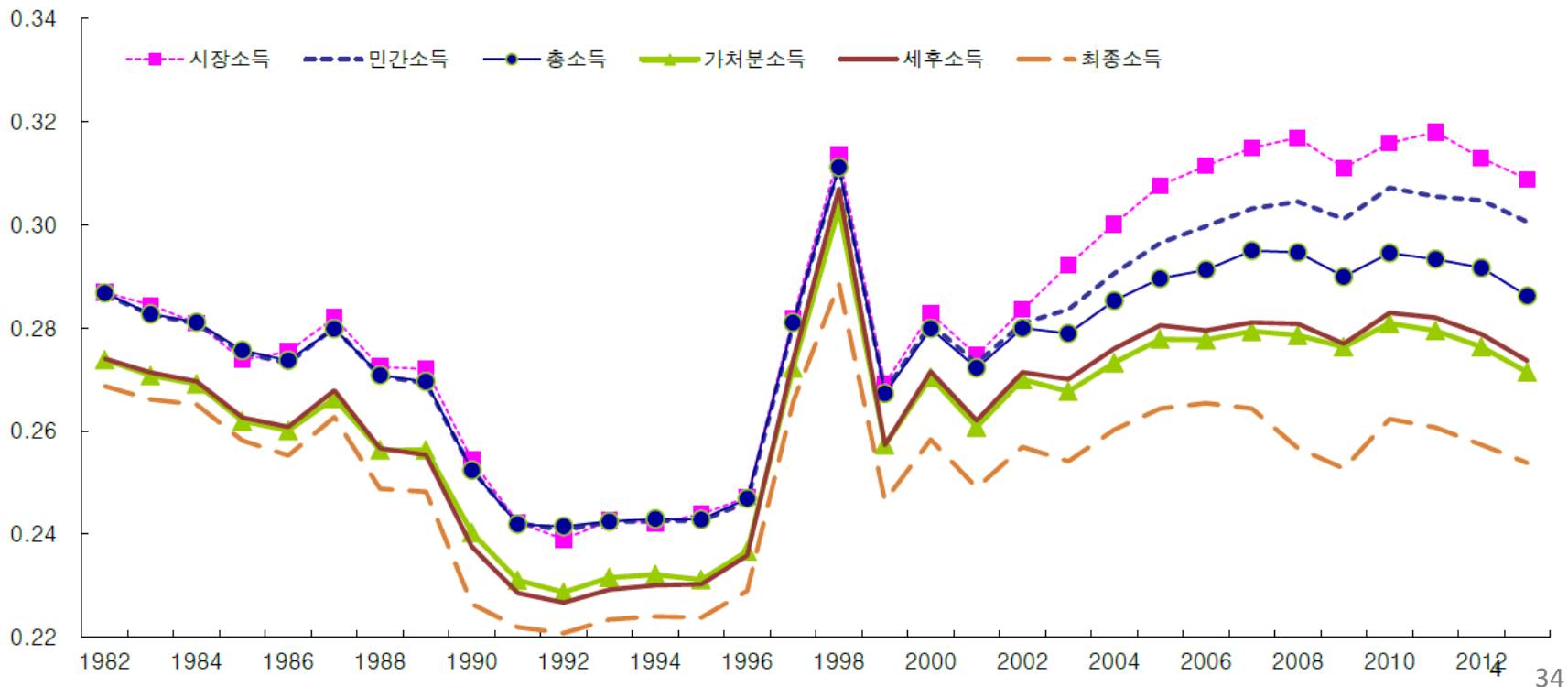
- 거시적 건전성: 성장유지 및 경기변동 완화

- 정부는 화폐를 발행하고 (금융정책), 큰 소비자이며 (재정정책), 다른 국가와의 관계를 조정(환율과 무역정책)
 - 이자율, 물가상승률, 고용, 성장 등을 관리
 - 제대로 관리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생긴 현상들
 - 대공황(Great Depression)
 - IMF 외환위기
 - 2008년 금융위기와 대불황 (Great Recession)
 - 그리스 재정위기

v. 시장만으로 모두 해결되는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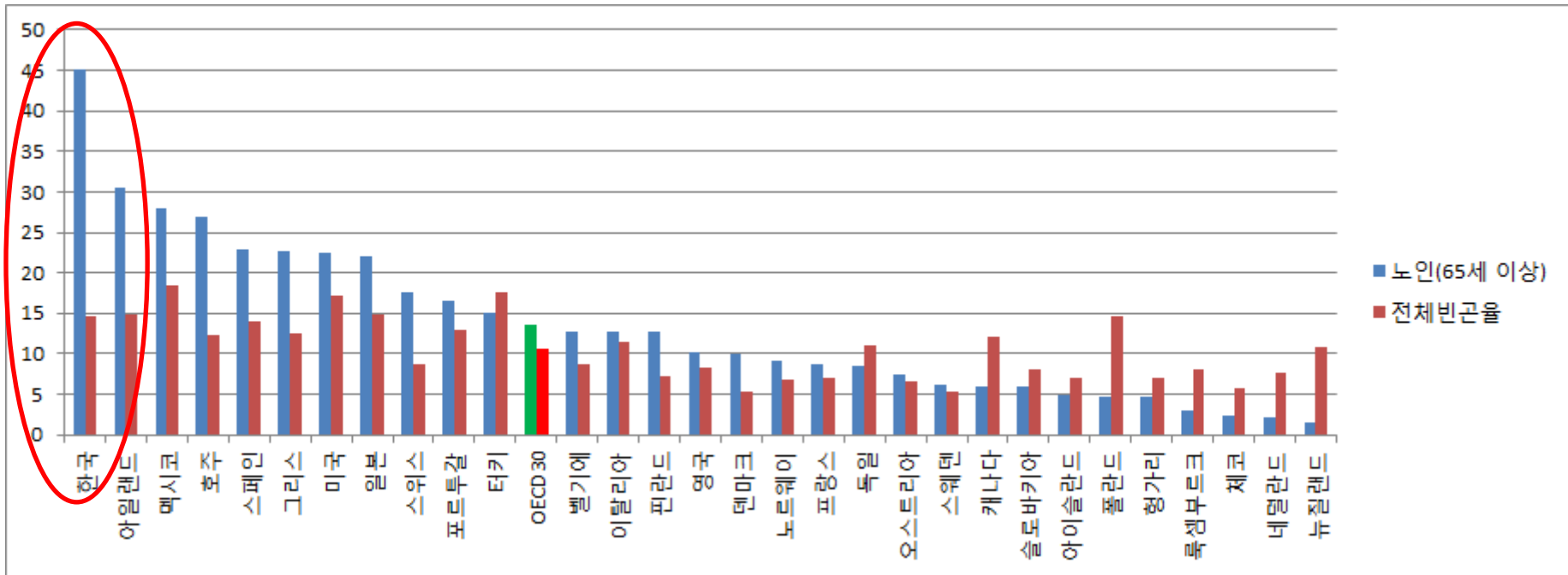
- 사회통합의 유지
 - 빈곤해소와 불평등 완화

[그림 1] 소득종류별의 지니계수 추이(2인 이상 도시가구)



V. 시장만으로 모두 해결되는가?

- OECD 국가 노인 상대적 빈곤율(중위소득의 50%선 미달비율)



v. 시장 만으로 모두 해결되는가?

- 노인빈곤과 복지의 문제

■ 국내 연령 및 성별 자살률 추이

(단위: 명, 인구 10만명당 자살자 수)

	연령별		남성		여성	
	1999년	2009년	1999년	2009년	1999년	2009년
평균	15	31	20.9	39.9	9	22.1
10대	5.1	6.5	5.6	6.9	4.4	6.2
20대	13.1	25.4	16.5	25.3	9.6	25.4
30대	17.3	31.4	24.1	35.6	10.3	27
40대	21.3	32.8	32.2	45.4	9.8	19.8
50대	23.2	41.1	36.4	62	10.3	20
60대	28.9	51.8	47.4	80.8	14.3	25.8
70대	38.8	79	66.5	123.9	22.8	49
80세 이상	47.3	127.7	81.9	213.8	34.1	92.7

VI. 시장경제의 미래

- “New Normal 시대(?)”
 -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저성장, 저소비, 고실업’이 새로운 경제질서로 자리 잡았다는 주장이 나타남
 - Mohammed El-Erian (2009)가 처음 제기한 개념으로 ‘과다한 부채와 이의 감축’, ‘세계화 효과의 감소’, ‘기술발달에 따른 일자리 감소’, ‘인구고령화’ 등을 원인으로 제기 (+ 불평등 심화)
 - 경제학적으로 이에 대응되는 개념은 ‘장기 정체론 (secular stagnation)’임
 - 투자감소와 과잉저축 상태가 지속되는 침체현상으로서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과감한 총수요 진작정책이 필요하다는 측과 생산성 저하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의견들이 있음

VI. 시장경제의 미래

- 무엇이 사실인가?
 - We don't know yet (2008년 금융위기 이후 8년이 지났을 뿐임)
 - 구조적인 변화(세계화 정체, 고령화, 인공지능 등) 역시 효과의 방향을 판단하기에는 이름
- 시장경제에 대한 우리의 인식이 달라질 것이 있는가?
 - 정부의 역할에 조정이 필요할 수 있다는 점은 틀림 없는 사실임 (재정/금융 정책, 산업정책, 복지정책 등)
 - 이미 정부의 역할은 매우 크고, 시대와 상황 변화에 따라서 지속적으로 변화해 왔음 (빠른 적응의 문제일 뿐임)
 - 하지만, 시장이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가장 유연하고 효율적인 시스템이라는 사실은 달라지는 것이 없음
 - 거시적 환경변화에 대한 대응의 필요성이 시장경제 축소의 명분이 되기는 어려움

VI. 시장경제의 미래

- 역사가 주는 교훈들

- 캘리코 금지법 (1701)

- 삼중혁명(Triple Revolution) 위원회 (1964)

“새로운 생산의 시대가 시작되었습니다. 새 시대를 조직하는 원리는 과거 산업시대가 농업시대와 달랐던 것처럼 지금의 산업시대와는 확연히 다를 것입니다. 사이버 혁명은 컴퓨터와 자동화된 로봇의 결합으로 구현됩니다. 이는 인간의 노동력을 훨씬 적게 사용하면서도 거의 무한대의 생산능력을 갖는 시스템으로 귀결될 것입니다.”

- 1999년대 ATM의 도입 이후 창구직원의 고용변화 (Bessen, 2015)

- 예상과 달리 고용은 유지됨 (오히려 기술인력의 고용 증대)
 - 더 많은 지점개설이 가능해졌고, 단순 입출금 업무에서 해방된 시간을 고객응대, 투자 및 대출상담에 활용했기 때문
 - 이러한 변화는 ‘시장과 경쟁’이 작동하였기 때문에 가능

VII. 결론

- 자본주의 시장경제는 인류가 발명한 가장 효율적인 경제시스템
 - 인간의 본질적 욕구를 바탕으로 최고의 성과를 끌어냄
- 정부는 자본주의 시장경제를 ‘보완’하는 역할을 할 뿐 ‘대체’하지는 못함
 - 대체하고자 했던 시도는 거의 실패로 돌아갔음
 -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려운 ‘보완’보다는 손쉬워 보이는 ‘대체’를 택하려 하는 시도들이 계속되는 것도 사실임
- 시장경제의 장점을 극대화하면서 한계를 보완해 나가는 것이 옳은 길임
 - 오도된 길로 갈 위험은 늘 있으며, 이를 피하려면 시장경제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필수적임

감사합니다

Q&A

namhoon@konkuk.ac.kr